

쓸 곳 많은 소비쿠폰... 쓸 때마다 헛갈리네

신용카드·선불카드·지역화폐·키오스크 결제 여부 등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마다 달라 이용자 혼란 잇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사용 여부가 달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직영점·가맹점 여부', '매장 층의 사용처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같고 '소비쿠폰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은 매장에서조차 매장 내부 사정에 따라 키오스크 결제로는 불가능한 곳도 있다. 결국 자기 소비쿠폰을 쓰는 데도, 일일이 매장 직원에게 "여기서 써도 됩니까" 물어봐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8만 7462곳이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외국계 기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쉽게 구분되는 건 아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스포츠 브랜드 매장 중 '나이키' 매장은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하다. 반면, 바로 옆 '디스커버리' 매장은 불가능하다. 비슷한 브랜드 매장이라지만 직영·가맹 여부나 매출 차이 때문이다.

충장서림에서는 쿠폰을 쓸 수 있지만 '알라딘' 중고서점은 불가능하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경우 '서브웨이'와 '롯데리아' 등은 가능하지만, 외국계 기업인 '맥도날드'와 'KFC'에서는 불가능하다.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버거킹'은 가맹점인 광주수완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광주운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 안내와 달리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여부와 무관하게 연 매출로만 사용 가능 여부가 걸린 사례도 있었다.

공전제과의 경우 충장점은 직영점이지만, 연 매출 30억 원 이하라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공전제과 직영점은 충장·두암·염주·진월·운암·수완·월남점 등 8개인데, 이 중 월남·충장·수완점 3곳에서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공전제과 측은 각 지점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베비에르 베이커리도 풍암지구는 사용이 어렵고 봉선점, 베비에르빵 광산구 등 2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생활용품점 다이소도 지점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린다. 다이소 광주 호대점, 평동점, 월곡점, 문흥점, 비엔날레점 등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나, 직영점인 충장로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올리브영은 광주 내 총 40개 매장 중 메가박스광주점(광산구), 광주두암점(북구) 등 2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을 선불카드형이나 지류형으로 받았을 경우, 사용처는 더욱 좁아진다. 선불카드형의 경우 광주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류형의 경우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라도 소비쿠폰 발급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갈리는 것이다.

매장 직원들조차 쿠폰 사용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장로 일대의 보드게임 카페, 성형외과, 액세서리 매장 등 일부 점포에서는 "본사나 사장님으로부터 아직 관련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이뷰의원, 박승철헤어스튜디오 광산이마트점 등은 카드형으로는 사용 가능하나, 지류형은 받지 않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제휴를 맺지 않아 신용카드, 선불카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경로로 받

은 소비쿠폰지원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매장 관계자 설명이다.

'키오스크'로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매장 사정에 따라 다르다.

동구 충장로의 와플대학, 점보커피 등은 키오스크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배스킨라빈스 광주충장점에서는 불가능해 카운터 직원을 호출해야 한다.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이 결제 대행 업체, 이른바 'PG사'에 직접 연결돼 있는 경우 해당 매장이 아닌 PG사의 매출로 기록돼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민생 회복을 목적으로 지급한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지역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광주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풍암호수공원 2년 후에 만나요 24일 광주 대표 수변공원인 풍암호수공원이 수질 개선 공사로 2년여간 폐쇄된다.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하수·편의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공사는 2027년 7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나명주 기자 mjna@

'민주주의 역사누리터' 2026년 개관 속도

광주교육청, 설계안 보고회

광주 민주주의 역사가 한눈에 담긴 광주시교육청 민주주의 역사누리터(가칭) 조성 사업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역사누리터 전시 콘텐츠 기본 설계안 보고회가 열렸다.

역사누리터는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에 지상 2층(연면적 1천736㎡) 규모로 추진하는 전시·체험 교육 공간으로 오는 2026년

문을 열 예정이다.

1919년 3·1 운동부터 2024년 12·3 비상계엄에 대응한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내부 공간은 커뮤니케이션 홀, 디지털실감영상실, 상설전시체험실, 디지털랩실, 체험교육실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학생들이 쉽게 민주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개인형 상호작용 체험 공간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교육청은 명칭 공모와 공청회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해남 80대 남성 발일하다 숨져

해남에서 80대 남성이 무더위에 발일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24일 해남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께 해남군 계곡면의 개 밭에서 A(8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이날 오전부터 발일을 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 중이다. 발견 당시 A씨의 당시 체온은 41.1도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경찰,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11월 30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속칭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단속한다.

이들테런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팔지 않고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 할인된 12만원을 준다면 '카드깡'으로 적발될 수 있다.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허위매출 발생'도 들여다본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할인 판매를 방자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의 행위다.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불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 버스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석열 '2개의 재판' 내달 19일 본격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본격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관리행위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별팀은 지난 19일 오후 직권남용 관리행위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관리행위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쿠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